

제 13회 한국출판학회 정기학술대회

“참여정부는 역대정권 출판문화정책 답습 말라” 한목소리

한국출판학회(회장 이종국)는 지난 6월 14일 출판문화회관에서 <참여정부의 출판정책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13회 정기학술대회를 열었다.

출판 관계자와 관련학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대 이정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동원대 부길만(출판미디어과) 교수가 ‘참여정부 출판정책의 허실과 발전 방안’을 신구대 이창경(출판정보미디어과) 교수가 ‘출판전문인력 양성지원 방향’을 백제예술대 김정숙 교수가 ‘현 정부가 고려해야 할 외국의 출판진흥 정책’ 등을 주제로 발표를 했고, 서일대 김진두(정보출판과) 교수, 사계절 출판사 박찬수 제작팀장, 박이정출판사 박찬익 대표, 원광대 이두영(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대진대 이용준(신문방송학과) 교수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정책만 있고 실천이 없었던 기존 대통령들의 사례를 환기하면서 이러한 선례가 반복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부길만 교수는 “그동안 규제에서 지원으로 돌아선 이후 현 정부의 출판정책은 상당부분 ‘국민의 정부’에서 기획추진되던 것의 연속선상에 있다”며 현 정부의 출판정책 방향에 대해 ●규제가 아닌 진흥정책으로의 정책 기조 발전 ●산·학·관의 연계 강화 ●출판의 국제 및 남북교류 지원 ●출판 관련학과의 교육지원과 출판학의 발전 지원 ●출판진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

치의 지속적 보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발표자들은 점점 학생들이 줄고 있는 출판학과의 위기를 우려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이창경 교수는 그동안의 출판인력 양성에 대해 “대학교육 체제가 교육기관별 연계성을 갖지 못하고, 교육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피드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산·학·관의 협조체제 미비 등의 이유로 대학에 설치된 관련 학과들이 위축되고 있다”며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신설과 연구활동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숙 교수는 “현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시행된 ‘출판및인쇄진흥법’과 이어 마련된 ‘출판및인쇄문화산업진흥발전계획’은 출판의 진흥정책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중장기 정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독서캠페인, 도서정가제, 도서관 도서보상금제 등 외국에서는 이미 오랫동안의 시행착오와 검증 거쳐 실시하고 있는 출판정책을 우리 현실에 맞게 영구적으로 정착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한 문화관광부 박광무 출판신문과장은 “5개년 계획은 단지 한번의 기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행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금년도에는 앞으로의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2005년 10월에 열리는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 주빈국가로 초청된 것을 계기로 유럽에 한국의 고급문화를 알리기 위해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민** 취재 신동섭 기자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도서정가제 개선 안 될 경우 단체행동 불사

지난 2월부터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온라인서점들이 기존 할인율을 유지 혹은 확대하고 있다며 중소 오프라인 서점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이창연 회장(52)은 지난 6월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온라인 서점들이 10퍼센트의 할인율 이외에 마일리지, 경품 제공 등 편법을 이용해 할인율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높이고 있어 도서정가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소 오프라인 서점들이 도산 등 여전히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이 회장은 문화관광부는 ‘출판및인쇄진흥법안’이 통과되기 전 서점연합회와 할인을, 마일리지, 경품 등을 이용한 신간할인율을 최고 10퍼센트로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등 세칙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서점연합회는 “앞으로 관련기관 방문과 서명운동을 통해 도서정가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를 통해서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집회 등 강경한 의사표현을 통해 관철하겠다”고 밝혀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 간의 갈등 양상이 주목된다. **한민** 취재 신동섭 기자